

이재명, 오늘 '선거법' 1심 선고... 여야, 유·무죄 공방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시 피선거권 제한에 결과 '축각' 민주당 "사법 살인" 무죄 확신...국힘 "최소 100만원 이상 벌금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14일 민주당은 무죄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총공세 모드로 돌입했다.

이날 민주당 일각에서는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번 수사를 두고 정권의 '정치보복'이라는 인식이 번져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대선 출마 자체가 가로막히지 않는다면 정치적 타격은 크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민주당 검찰특재위원회 소속 의원과 지도부 다수는 15일 판결이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이 대표를 응원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으나,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판부가 이미 유·무죄를 가려놨을 텐데 민주당이 모인다고 결론이 달라지겠냐"라며 이런 시각에 선을 그었다.

이처럼 '무죄 예상' 기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과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판결이 나왔을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이 어떻게 될 지에 축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민주당은 400억원대의 선거 보전금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이재명 지도부가 최대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당내에서는 '이재명 리더십'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당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만한 차기 대권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유·무죄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판결에 따라 플랜 A,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워낙 그런 (판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당내에서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판결이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비해 유무죄를 둘러싼 다툼이 더 치열했던 만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까지 받아내야 진정한 사법 리스크의 큰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는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략부총장은 BBS 라디오에서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수긍할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니 징역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공판에서 유죄 선고를 기대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격'에도 미리 대비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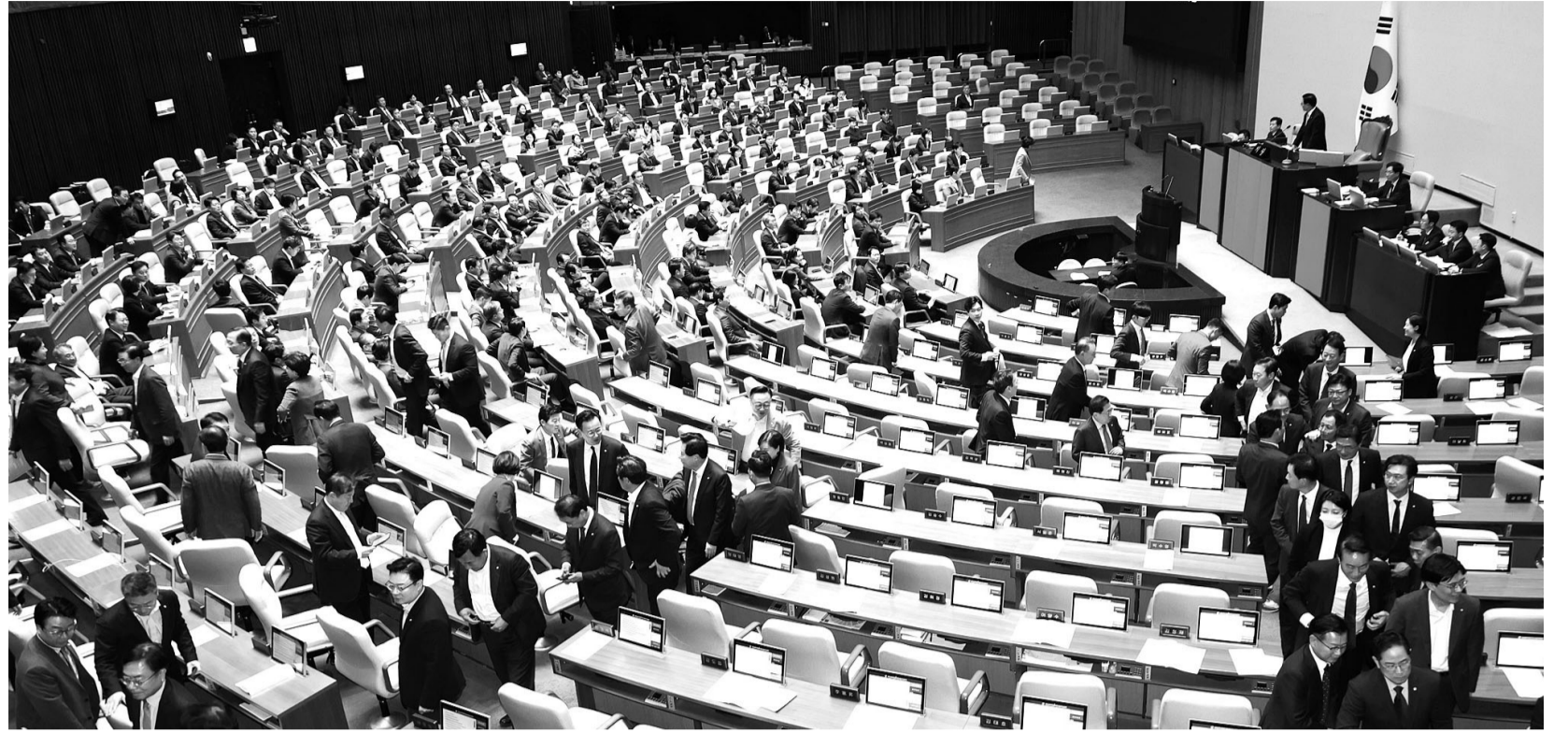
이른바 '사법방해죄' 입법도 잇따르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전날 '판사와 그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겁박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판사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특별감찰관 등 여러 내각등 요인을 제거하고 전열을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같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뽕뽕 뽕뽕 방어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지도부 인사도 "지금은 당이 한마음으로 '이재명 단죄'를 외칠 때"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힘,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 불참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친 뒤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 진행 당론 확정

'김여사 특검법' 저지 대안...민주당 비협조시 본회의 의결 불가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 진행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추경호 원내 대표에게 일임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일정 기간 내 반드시 북한인권 재단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내에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지만, 최근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이슈'의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제시하면서 다시 부각됐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국

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고,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진행, 북한인권재단 관련 법 개정 추진,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 및 재의결 저지 등 3가지는 모두 당론으로 정해졌으며, 한 대표의 제안 설명에 의원들이 표결 없이 박수로 추진했다고 추 원내대표는 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

다"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혐의를 감찰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역할을 하는데 (김여사의 의혹은) 감찰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수사 대상을 감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특별감찰관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여사의 여러 의혹들을 정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3명의 후보자를 본회의에서 의결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민주당이 협상에 부정적이라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는 사실상 진행이 어려워진다.

/*연합뉴스

이재명 "아내, 보복 수사의 희생제물"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둔 이날 오전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선 패배 후 보복 수사로 장기간 먼지떨기 끝에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년 동안 백 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수사가 계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대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며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누리거나 기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주식시장 선진화·주주 권리 확대"

상법 개정안 당론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노 원내대변인은 "체부적인 이견이 나와 일부 조항의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담았다"며 "지분이 많거나,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

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와 군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도 당론 의결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